전남도, 10개 대선공약 현실화 나섰다

에너지신산업·무안공항 육성 등 16조원 규모
새정부 국정과제·부처별 업무보고 반영 건의

전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 공약의 조기 예산 투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018년 정부부처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관련 공약은 모두 10개에 48개 세부사업으로, 16조 100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9일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 채택된 전남 공약의 세부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약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을 새 정부 국정운영 동향에 맞춰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국정과제 및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로 5월에는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 정부 업무보고와 2018년 부처 예산안에 전남 공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6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대선 공약을 점검·분석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전남 공약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본격 심사와 확정이 이뤄지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9월부터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채택된 전남의 공약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 광주·전남 상생공약 2개를 비롯해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산업 추진 ▲광양항 경쟁력 강화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7개 공약 11개 세부사업, 사업비 6조638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전남에 큰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 공약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보고에 우선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소관 부처가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타당성 있게 보완한 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건의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전북도 日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한국 남부권 지자체 설명회 참여
'전라도 정도 천년' 등 관광 홍보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전라도 3개 시·도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이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배치 논란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관광객 유치 다변화 조치를 위한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3개 지자체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7 코리아 트래블마트와 한국 남부권 지자체 설명회'에 참여해 전라도 공동부스를 마련한다.

광주시 등은 현지 여행사 상품기획자, 언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라도 정도 천년 사업'등 관광자원을 홍보한다.

공동 마케팅은 새 정부의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비해 선제 대응하고 미래 잠재 관광 고객인 수학여행 상품, 무안공항과의 전세기 연계 상품, 지역 테마 상품 등 일본 관광객을 전라도에 집중 유치하기 위해 마련했다.

3개 시·도는 중국의 방한 상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공동으로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 마케팅은 지난 3월 동남아, 이달 초 일본 기타큐슈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시 관계자는 21일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文대통령 공약 병사 월급 내년부터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병기준으로 올해 19만 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병사월급 인상 계획은 올해 종료됐다. 병사 월급은 2012년 대비 올해까지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등이다. /연합뉴스

국군광주병원 옛터 산책로 개방 국군광주병원 옛터 산책로(5·18사적23호)가 지난 20일 오후 개방됐다. 개방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다.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감시 하에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의 치료 및 조사가 이뤄졌던 곳으로 2014년 11월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 사퇴

청문회서 돈봉투 파문 도덕성·자질 논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적격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박중배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촉 산업현장교수가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박 후보자와 광주시가 부담을 느꼈고 이같은 뜻을 윤장현 시장에게도 전달했다. 박 후보자는 청렴성 인식 문제와 후보 지명 이후 사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던 행동도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공기업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점, 직무계획과 제출서류의 오류, 배우자의 잦은 고이율 대출 이용 전력, 도시공사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등도 오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청문회 결과로 여론이 악화한데다 오는 22일 채택하는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내용도 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박 후보자와 광주시도 이를 우려해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과보고서 채택 전 시의회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과보고서 채택 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3차 공모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다시 공모하기보다는 당분간 지정 대리로 도시공사를 운영한 뒤 지방선거 뒤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일 박근혜,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첫 정식재판 열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5월 넷째 주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봄 가뭄 대비 안정적 물 공급 선제적 대응

전남도가 봄 가뭄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역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강수량에 따른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을 수립,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근 4개월간 강수량은 13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415mm)보다 적게 내렸다.

5월 현재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3206개소의 저수율은 73%로 평년(70%)보다 높아 이앙급수가 원활할 전망이다. 생활용수댐 저수율도 48%로 평년(43%)보다 높아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진도군 군내 둔전지 등 농업용 저수지 4개소와 신안군 18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모내기 작업에 불편이 예상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